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9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음 2월 19일) 제17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LX 전북본부 광주전남 흡수통합 ‘안될 말’”

체계적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시스템 구축 나서

▶ 도-LX공사 노조 강력 반발

“국토 균형발전에 찬물 전북 소외론 심화와 함께 직원들 주거지 이전 따른 인구 유출 가속화 될 것” 도민 불편 최고조 달할 듯

▶ 송하진 지사도 준치 강조

‘전북 뭍 찾기’ 일한 민주당 도당도 반대 목소리

공공·특별지방행정기관 49개중 45개가 광주·전남에 편중돼 있는 현실에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지역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합하려는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를 ‘전북 뭍 찾기’의 해로 선언한 전북도와 LX공사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15일 LX가 전북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해 오면서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의 메카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북본부를 없애려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통합 반대 의견을 분명히 내놓았다.

도는 특히 전북본부가 광주·전남본부로 흡수 통합될 경우 전남에 비해 혜택을 받았다는 전북 소외론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주거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통폐합될 경우 본부차원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3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기능 조정을 추진하면서 전북지역본부를 없애고 광주 전남지역본부로 흡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천현 건설교통국장(오른쪽)과 전재현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노조위원장이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간 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광주까지 오가는 상황이 예견돼 도민 불편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35%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통합에 따른 전북의 인재들 채용이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북본부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LX의 기능조정 등에 대해 공사 노동조합측에서도 전북도와의 입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지난 MB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

인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 조치 통합 폐합 논리는 곧 진행될 대선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부에서 정부정책 전반을 재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전북지역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서비스 부문 기능조정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대국민공공서비스부문을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새로운 정부의 리더십에 맡길 것을 요구한다”며 “공사는 천편일률적인 갯수 할당식으로 진행되는 지역에 불평등한 통폐합 구조조정 논의를 당장 중지하라”고 덧붙였다.

송하진 지사는 “도민이 체감하는 전북 소외감과 인구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전남과 함께 묶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호남 프레임’에서 탈피해 ‘전북 뭍 찾기’의 일환으로 LX 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의 광주·전남본부와의 흡수 통합을 반대한다”며, “민약 통합할 경우 전북뭍 찾기 일환으로 통합할 지역 본부를 전북에 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지난 2015년 정부의 ‘경

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공공부문 사업의 폐지, 축소, 기관간 유사·중복 해소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LX 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북지역본부를 호남지역본부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8개 지역본부로 축소하는 기능조정(안) 마련 중에 있다.

또한 230여명의 직원들이 분포돼 있는 도내 12개 지사를 10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시는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임경진)는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전주시 사회적기업 61곳과 협동조합 65곳, 마을기업 5곳, 자활기업 13곳 등 사회적경제조직 144곳을 대상으로 운영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사전 전화조사와 현장방문조사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기업의 기본현황과 기업 설립동기, 경영상 애로사항, 상품(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소개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항목들을 중점 조사했다.

전주시, 실태 조사 결과 토대로 전문·통합적인 경영지원 제공

조사결과, 전주시 지역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성 부족과 잦은 이직에 따른 인력채용의 어려움,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손꼽았다.

시는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사회적경제 프로보노(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자격을 돕는 활동) 지원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번 조사결과 수집된 사회적경제조직 정보와 이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전주시 홈페이지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관료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홍보 책자도 제작돼 사회적기업 관료 개척 및 마케팅 활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경영지원을 제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종별 협업을 통해 전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임경진 센터장은 “전주의 지역경제가 다소 침체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과 공동체간 나눔과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 될 수 있도록 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전북지역 대선공약의 상당수가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전북이 야당 지역으로서 불이익과 소외를 받은 것은 이번뿐이 아니지만, 일부 사업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지역차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5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부에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이 약속한 전북지역 대선공약은 모두 7건, 사업비로 환산하면 모두 15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북지역 대선 공약 상당수 ‘공약’

(空約)

지역 차별도 넘어... 새정부에서 지역 현안 해결 이어가야

이들 가운데 신규사업 3건은 착공되지 않았다.

실제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사업비는 이에 반영되지 않았다.

동부내륙권 국토 건설사업과 부창대교 건설사업도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 지원됐거나 편성된 대선 공약 관련예산은 약 3조

4341억원으로, 이는 총사업비(15조 7172억원)의 2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체 투자액의 97%(3조 3271억원)는 새만금사업의 몫이었다.

이에 지역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현안들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사업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요 현안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차기 대권주자들이 이를 다시 공약화해주지 않는다면 회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황”이라면서 “본격화된 대선정국에 맞춰 대선주자들이 새관짜기에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동안

인사와 예산에서도 철저히 소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대선후보 유세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인사 대 탕평정책을 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공약불에 불과했다.

전북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모두 117명의 장관이 임용됐지만, 전북 출신은 겨우 4명으로 3.4%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는 8.2%를 차지했고 LH 경북 진주 이전 등 전북 확대의 대명사 격이었던 이명박 정부 4.8%에 비해서도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인재용 기자